

미국, 허리케인 이후 빈곤문제 가시화

※ 대통령 지시내용 : ‘자유주의자들은 허리케인 이후 빈곤문제 논의에서 성과를 기대’ 라는 제하의 기사(NYT, 10.11)를 토대로 작성한 ‘감세냐 안전망이냐’ 의 보도(한겨레, 10.14)에 대해 분석할 것

1. 허리케인의 영향관련 미국언론의 최근 보도동향

-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미국에서 빈곤, 주택, 일자리, 인종차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
 - 부시대통령이 9.15 현지방문하여 “인종차별에 기인한 빈부격차를 확인하고, 이 문제에 단순히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고 연설한 것이 발단(NYT, 10.11)
 - 금번 사태를 계기로 빈곤의 원인에 대한 소득계층간 시각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부자들은 노력부족 때문이라고 보는 반면, 빈곤층은 불리한 대우 탓으로 돌림(AP, 10.17, Herald Tribune 10.18)
 - 최근 GM 자회사인 델파이사의 파산신청에 따라, 높은 기업연금과 의료보험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삭감으로 미국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도 대두(동아, 10.19, 폴 크루그먼 기고)
- 에드워즈 前상원의원은 10.17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60년대의 베트남전 반대운동, 80년대의 인종차별금지 운동과 같은 빈곤퇴치 캠페인을 개시하였음(ABC, 10.18)
 - 미국내에 어린이 13백만명을 포함, 총 37백만명이 빈곤에 처

해 있으며, 빈곤문제는 이제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와 빈자간의 문제라고 주장

- 그는 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운동에 20시간 이상을 자원 봉사하도록 요청
- 앞으로 10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빈곤문제에 대해 토론 예정
- 진보진영에서는 금번 재앙을 계기로 보수주의자들의 노선변경을 하게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아직은 변화조짐이 없음
 - 워싱턴 포스트는 1) 보수주의자들은 빈곤퇴치보다 피해재건에 관심이 있고, 재건비용 때문에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2) 복구재원조달을 위해 감세법을 포기하지는 않고, 여타 지출축소를 통해 처리할 움직임이고, 3) 삭감대상으로 의료보호비를 1차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빈곤층에 돌아가는 예산임(WP E. J. Dionnie 컬럼, 10.14)
 - 부시대통령의 실제 행동은 '카트리나 피해자에게는 무조건 5개월동안 특별의료보호 혜택을 주자'는 공화당원의 법안까지 반대하는 등 빈곤극복에 역행하고 있음(NYT, 10.11)
- NYT 드팔 기자는 "93년 클린턴 대통령이 부유층의 세금을 올린 결과, 경제가 붐을 이루고 그 후 7년 동안 빈곤층이 감소하였다"면서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주장 (10.11, 한겨레 신문에서 인용한 부분임)
 - 빈곤극복을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나, 부시행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

2. 미국에서의 경제이념 논의동향과 전망

- 공화당 정부의 재집권으로 진보주의가 많이 퇴보하였으나, 민주당과 진보성향의 연구소들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
 - 민주당은 복지지출 확대, 퇴직의 안정성 보장, 충분한 의료보호, 낙태 및 동성결혼 허용 등 공화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구 (민주당 정강정책 및 공약)
 - ※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감세정책이 재정적자만 초래한다는 이유로 감세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으나, 增稅문제에 대해서는 노령화로 인하여 조만간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란 소극적 증세지지 입장임
 -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케이트연구소(Cato Institute),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등 진보성향의 싱크탱크들은 경제사회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여 미국 지식층의 지지를 유도해 나가고 있음
 - * 브루킹스연구소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10월 핵심이슈로 다루면서 ①빈곤 문제가 뉴올리안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② 도시빈민에 국한시킨 부시행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고, ③ 빈곤의 집단화가 더 많은 사회비용을 요구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④ 90년대 클린턴 시절의 정책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강조함
- 미국의 진보주의 단체들은 사회보장개혁, 세제개혁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사이버상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집단행동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수행
 - 현재 진보단체들은 세제개혁*이 중산층의 부담을 유발하고, 개인투자계정**의 도입이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의 불안정성만 키운다는 이유로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반대함

* 현행 소득세 중심의 세제를 소비세 위주로 전환하고, 감세를 영구화시키

는 내용의 개혁

** 사회보장기금이 2018년부터 당기순적자로 돌아서고, 2042년에는 완전고갈 될 전망이므로 매월 불입하는 사회보장세(급여의 12.4%, 개인 및 고용주가 각각 50%씩 분담)의 1/3을 개인투자계정(private account)으로 돌려 간접 투자기관을 통해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 수익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발상임.

- 금번 카트리나 사태는 인종문제와 빈곤문제를 극명하게 노출시킨 사건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지역문제기 때문에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 미국의 중하위층 소득자들은 삶의 질이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중하위층도 '노력하면 주류가 될 수 있다'는 낙관주의적 경향이 있어(소위 American Dream), 진보주의가 확산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임